

평양선언 · 군사분야 합의 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靑 “원칙적 · 선언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 받은 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이 재가하면 비준까지 완료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제 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

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2~3일간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제·개정 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관측이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은 모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데 대해 선수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속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어느 나라 옛장수의 논리인가”라고 지적하며 “일의적이고 자의적인(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여야 공방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반면 청와대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제도를 통한 평양선언의 이행이 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대화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를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분,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아리울의 이야기, 새만금을 수놓다

새만금상설공연장서 '아리울스토리 해적2' 내달 17일까지

전북도가 추진하는 '아리울스토리 해적2' 공연이 새만금 상설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다.

새만금 완공을 기념하고 관광객 유치에 바다 한가운데 예술 공연장을 개장한지 8년째다.

이 공연은 화려함과 볼거리가 풍부한 의상과 허공을 가득 메운 긴 장막은 물론 볼수록 아름답다.

특히, 박진감 넘치는 '군무'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또한, 매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우들은 한국, 고전무용을 전공한 엘리트로서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자칭 새만금의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한결 같이 “전북의 새만금에서 이런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지난 9일 공연은 컨디션 난조로

광대가 빠진 채로 진행되어서 그런지 극 중간에 등장해 재치 있는 몸짓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광대는 동료배우들과는 다르게 많은 나이이지만, 무대에서 후혼은 기성 배우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전주에서 공연을 보러온 한 관객은 “새만금상설공연장을 찾는 많은 관객들에게 남은 공연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며 “두 번째 관람이었지만 보고나면 또 보고 싶을 정도로 깊은 인상이 남지만 이번 공연엔 광대가 없어 좀 그렇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아직도 가까이 전북에 사는 주변 지인들도 새만금에 이런 멋진 공연이 있는 줄을 모른다”며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아리울스토리 해적2'는 11월17일 마지막공연까지 10여 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진성 기자



농촌지도 전문가들 한자리에... 세계농촌지도포럼 개최식

23일 전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 '2018 세계농촌지도포럼(GFRAS) 개최식'에 참석한 60개국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농촌지도포럼은 각 나라의 농촌지도 분야 학자와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에 속한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해마다 회원국에 모여 대륙별 농촌지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토론회이다.

23일 전주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 '2018 세계농촌지도포럼(GFRAS) 개최식'에 참석한 60개국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농촌지도포럼은 각 나라의 농촌지도 분야 학자와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에 속한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해마다 회원국에 모여 대륙별 농촌지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토론회이다.

불법조업 · 유통 강력 단속

도, 9월 말까지 단속실적 64건

이달 서해어업관리관 등과 단속

전북도는 올해 불법어업 방지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9월말까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충남 닳자망과 전남 잡수기 불법조업 등 업종 간 갈

등 및 수산자원 남획의 가속화 해소를 위한 여름철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64건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 단속실적 48건과 대비해 33%나 증가한 것으로 도가 불법어업에 엄정 대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도는 10월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관, 해경서, 도 시군 합동으로 불법어업 및 어민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육해상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관내 해역에서 꽃게, 멸치, 전어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 지역 어선들과의 조업분쟁 및 도계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어망·어구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전남 잡수기 불법조업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비안도, 두리도, 임수도 해역의 각망어업, 충남·전남산적의 어선들이 도계위반 연안자망, 근해통발 등 조업분쟁으로 연안지방어민들 피해를 발생, 면허 어장의 김양식 불법시

설물 등 불법조업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여 시·군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위관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관과 해경과 협업으로 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의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구글에 가짜뉴스 104개 삭제 요청 거부 당해”

與 가짜뉴스특위, 유감 표명... 구글 측 “위반 콘텐츠 없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삭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박광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조작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의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연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

을 준수하는 등의 원칙과 서비스약관, 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이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구글코리아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여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특히 구글코리아에 삭제 검토를 요청한 사안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을 꼽았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